새만금, 국가 RE100 시대 심장이 되다

태양광 등 총 7GW,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2022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 RE100 구현 여건 만들어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등 전북 재생에너지 허브 도약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RE100 시대를 선도할 채비를 마쳤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필두로 국제 탄소 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들에게 RE100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전북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체계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RE100 산업단지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갖췄다는 평가다.

16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조성 중이다. 특히 2029년에는 수상태양광 1.2GW를 RE100 기업에 본격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산단이 조성 중으로,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도 새만금은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1.5GW 규모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해 첨단기업의 전력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서해안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전력망과의 연계도 용이해 재생에너지 발전원과 기업 간 계통 연결에 유리한 입지를 자랑한다. 이러한 조건은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기업 유치에 결정적인 강점으로 꼽힌다.

새만금 산단 5·6공구는 2022년 이미 전국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구현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조성 중인 산업용지와 수변도시를 연계해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에너지 자립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새만금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과제 51번에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과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이 명시됐다. 국정과제 39번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지산지소형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해왔다. 새만금을 풍력과 태양광, 조력 에너지 기반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SOC 조기 완성을 통해 전북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도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선도모델로 삼아 대규모 전력 수요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선다. 제도적 RE100 단지와 물리적 RE100 단지를 병행 조성해 기업의 다양한 RE100 이행 방식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입주 기업에는 세제 감면, 전력요금 인하, 재생에너지 저가 공급, 전력망 연계 비용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환경과 안전, 금융 등 기업 규제도 대폭 완화해 투자 유치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확산단지 1GW 추가 지정을 추진해 집적화단지 사업구역으로 확대하고, 내년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에 착수한다. 한국전력의 선투자를 통한 전력계통 적기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전북은 RE100을 넘어 주력산업의 친환경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산업에서는 암모니아 등 친환경 선박 대체연료 실증 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농건설기계 분야에서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과 디지털 전환 플랫폼 개발을 진행 중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은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유일의 RE100 최적지"라며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기업이 찾는 재생에너지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북 국회의원 2명 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이성윤 의원 · 윤준병 의원

이성윤 의원

윤준병 의원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명이 올해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먼저,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2025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 파기환송심 비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 △국민의힘 정당해산 필요성 강조 △검찰·사법개혁 촉구 등 12·3 윤석열 불법비상계엄 내란을 신속하게 끝내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시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질의로 국감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쟁점화하며, 황당한 재판진행으로 비판을 받는 내란사건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날카로운 지적,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농정 방향 그리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 실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제시하며 지난 정부 농정 왜곡을 조목조목 짚었다. 당초 밀가루 대체라는 목적과 달리 주정용(술 제조용)으로 전용되고 있고, 시행 3년 만에 생산량 87%가 재고로 쌓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만호 기자

남북관계 재정립, 화해·협력에 기반해야

민주평통, 직능별 대표자회의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 등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에서 '직능별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방용승 사무처장이 특별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해찬)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 호텔 스카이파크 킹스타운에서 전국 각지의 정치·행정·법무·외교·안보 분야 직능 자문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능별 대표자회의'를 열고 화해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공존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강의에 이어 종합 토론과 조별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문위원들은 80여 년에 이르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누적된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을 쏟아내며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방용승 사무처장은 주제강연에서 "전국 2만여 명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국민 50명씩을 직접 만나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집합해 나가면 국민 100만명의 의견을 듣는다"며 "남북이 서로 '틀렸다'는 인식을 버리고,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존중할 때 평화는 비로소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청년층 가운데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22.4%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평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철운 연구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 80주년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대북 3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의사 부재를 제시하고,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3대 핵심 과제로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꼽았다.

아울러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공존의 새 시대', '남북한 공동성장' 비전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진 조별 토론에서는 △함께하는 동북아 평화캠프 운영 △민주평통 자문위원 간 SNS 교류 활성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한반도 평화 K-쌀막걸리' 프로젝트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기본지침 수립 △남북 민간교류 확대를 통한 공동성장·공동행복 △헌법과 국제법에 기초한 법치 평화체제로의 전환 △코리아-아마존 프로젝트 △남북관계 협력을 위한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 신뢰관계 재구축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논의했다.

민주평통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향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자문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나인권 도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한 지방소멸 가속"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지역상품 우선구매, 관내 기업 우대 규정 등을 경쟁제한적 규제로 분류해 개정·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경제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규제 해석"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역상품 우선구매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는 근본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지역우선정책을 '경쟁제한'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주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반영한 합리적 경쟁정책 가이드 라인 마련 △관련 법률에 지역중소기업·지역농수산물 우선구매 권한 명문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서 국가경제 활로 찾자

민주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제안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전력난에 시달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송전탑 건설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갈등과 전력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즉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새만금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찾자는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완공될지 모를 송전선로만 바라보는 '희망고문'을 끝내고,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업이 가능한 새만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는 것이 진정한 새만금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전기를 억지로 수도권으로 끌고 가는 대신, 전기가 넘쳐흐르고 부지가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내려오는 것이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1년 6개월(18개월) 안에 원전 4기에 해당하는 약 4.7GW의 RE100 전력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새만금 4.7GW 즉시 공급' 전략은 크게, 방치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활용한 '영농형 태양광' 구축, 규제 없는 '에너지 용지' 활용, 송전탑 없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의 국가 정책 공식 검토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시 △영농형 태양광 규제 특례 적용 등 3대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만호 기자

지자체 미래 인적자원 활용 지속가능 교육생태계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박정희 도의원 주관… 전북 교육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도의회 교육위, 연구성과 정책화… 의회 차원 후속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영유아 교육 현실화 실천 연구회)는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미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박정희 대표의원(군산3)이 주관해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북 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해당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우수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중앙정부 정책이나 교육감 성향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교육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보고에서는 전북 지역이 직면한 인적자원 양성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농생명·탄소 등 지역 핵심 전략산업과 교육시스템 간의 미스매치 문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외 지방교육자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성·안정성·대응성·연계성 측면에서 전북 교육행정이 보완해야 할 지점도 함께 도출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북형 맞춤 교육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법·제도 개선, 재정 운영의 효율화,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조 강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과 함께 단기·중기·장기 실행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정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구 결과가 향후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연구 성과를 정책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무주군의회 정례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는 16일, 33일간 진행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동안 군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총 31건의 일반의안을 심의·의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답게 다양한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요구 60건, 처리요구 65건, 건의 75건 등 총 200건의 지적 사항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감사 과정에서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동)의 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은 제출된 요구액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무주=전문선 기자